

# 學問의 正體性 위기의 社會的 원인

李 鍾 珏

(江原大 教育學科)

한국의 학문이 정체성 위기 상태에 있다는 진단은 학문의 토착화 논의에서 잘 드러난다. 學問의 土着化에 관한 논의는 1970년대 이후에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그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간추려 보던 다음과 같다.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는 1972년 『한국의 정치·법률·행정의 토착화에 관한 연구』(1971년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연구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한국사회학회에서는 1979년도 연차대회에서 한국사회학의 반성을 주제로 삼았으며 토착화 문제가 주로 거론되었다(『한국사회학』, 제13집). 유네스코 한국본부 산하에 설립된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에서는 1979년 『한국사회과학의 토착화: 연구방법을 중심으로』라는 세미나 보고서를 냈고, 동 협의회는 1984년에 『한국사회의 자생적 발전』에 관한 세미나 보고서를 계속 냈다. 성균관대 사회과학연구소가 1983년에 펴낸 『사회과학』(제20집 1편)은 사회과학 토착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교육학계에서는 토착화에 대한 논쟁이 1970년 전후로 열기가 붙어 이루어져 오다가 이돈희 외 『한국교육학의 성장과 과제』(1983), 한국교육학회 편 『한국교육학의 탐구』(1983)가 한국의 교육학을 반성해 온 논지를 담고 있다. 이종자의 『한국교육학의 논리와

운동』(1989)은 본격적으로 토착화 자체의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논한 서적이다. 김진균 등이 주장하는 민족적·민중적 사회과학론(『사회과학과 민족현실』 1권(1988)과 2권(1991)) 또한 정체성 위기의 지적과 그 확립을 위한 중요한 시도의 하나이다.

이러한 글들에는 우리의 학문세계에 심각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다. 우리 학문의 세계에 대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한국 학문의 정체성 위기라고 진제하고, 그 원인에 대한 추론을 해보고자 한다.

## 1. 正體性 위기와 土着化의 과제

학문 분야마다 경우와 내용을 달리 하겠지만, 우리의 학문 전체를 종합하여 생각해 볼 때 정체성의 위기는 그것이 과연 한국의 학문으로서 한국사회의 현실과 장래를 담보할 수 있는 학문이라는 문제, 즉 토착성의 빈약함이 가장 큰 위기의 원인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의 위기는 한국과 같은 제3세계 국가들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중진국과 심지어는 캐나다 같은 선진국에서까지 위

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은 현대 학문의 後發國들은 식민지 시대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오랫동안 형성해 왔던 학문의 전통을 무시하고 단절시켜 왔으며, 서구학문을 받아들이기에 혈안이 되었다. 우리는 일제를 통하여 서구학문을 부분적이고 편파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여 해방후 미국으로부터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학계는 해외의존적, 특히 대미의존적 주변부 지식체제로 형성되었고, 결국에는 한국의 학문에 한국의 문화와 역사와 현실의 단절이라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에 후발성 학문의 정체성 위기가 해외의존성과 그 모순으로 내재하게 된다.

대외적 자립의 정도에 따라 학문의 토착화를 설명하는 데 세 가지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구조적 토착화, 내용의 토착화 그리고 이론의 토착화이다. 構造的 土着化는 한 국가가 가진 지식의 생산 및 분배능력에 관한 것으로 ①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② 자국학자로 구성된 학문공동체, ③ 자국에서 생산된 학술문헌의 존재를 포함한 능력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의 구조적 토착화는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론 상태이지만,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학자들이 외래지향적이며, 의존하는 문헌이 외국문헌 위주이고, 전달형식이 모방과 빈안 위주라던 그것은 외형상의 토착화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內容의 土着化가 이루어져야 한다. 내용의 토착화는 한 나라의 지식이 자국의 사회와 사람과 문화와 역사 및 정치경제 제도를 다루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내용의 토착화는 새로운 개념이나 이론의 창조를 뜻하지는 않는다.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여 외래의 개념구조나 이론에 따라 해석하거나 또는 외래이론에 따라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고 그 이론에 의존한 해석에 그친다. 예를 들면 T. Parsons의 유형변수나 A. Inkeles & D. Smith의 현대화 척도 등을 한국에 적용하여 그 이론들에 관한 사례들은 한국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이론들 자체가 한국의 사회적 현실을 편파된 각도에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理論的 土着化의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론적 토착화는 한 국가의 학자들이 자기 사회의 세계관과 사회문화적 경험, 지향해야 할 가치 등을 반영한 개념적 분석망과 메타이론을 구안해 내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학자들이 입수가 가능한 외래지식을 배척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식의 패러다임과 이론과 개념이 가진 잠재적·현재적 전제들을 자국의 구체적인 현실과 맥락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평가해서 재정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학문적 탐구결과가 공개적으로 발표되고 서로 읽고 논의하고 비판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정책으로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은 하나의 사회적 비판과 대화이며 사회적 문제해결의 과정이다. 이 대화나 문제해결의 과정은 그 사회에 무엇이 존재하고,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관한 대화이다. 학문은 이런 문제에 관한 대화의 한 가지 독특한 형식, 즉 전문적-심층적-체계적 대화이다. 해외의존적 학문상황 아래에서의 學問的 對話는 우리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화를 의국인이 진단하고, 상황을 규정하며, 처방내린 대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격인 것이다. 우리 학문의 정체성 위기가 바로 이런 것은 아닌가? 학문적 대화가 자생적·개방적·주체적이고, 자유로우며 자기수정적일 때, 그 사회는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비판하며 스스로 상황규정을 하고 스스로 수정하며 자기 사회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2. 正體性 위기와 學問의 社會的 측면

학문활동은 과학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양 측면을 갖고 있는데, 학문의 정체성 위기의 원인에 대한 추론은 주로 학문의 사회적 측면과 관련된 것이다. 학문의 科學的 側面은 학문활동을 통하여 창조되는 지식 그 자체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측면이다. 학문의 사회적·조직적 측면은 학문활동이 다양한 사회세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측면을 말한다. 학문을 하나의 사회체제로 보면, 학문은 학자들 사이의 조직화된 사회활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학자들 사이의 이런 활동은 規範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상적 규범론과 현실적 규범론의 두 견해로 나누어진다. 이상적 규범론은 객관성의 규범(the norm of objectivity), 조직화된 회의주의의 규범(the norm of organized skepticism), 감정적 중립성의 규범(the norm of emotional neutrality), 일반화의 규범(the norm of generalization), 공유성의 규범(the norm of communality), 비이해타산성의 규범(the norm of disinterestedness) 등을 강조한다. 그러나 현실적 규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학자들이 반드시 이런 규범에 따라 학문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규범으로부터 일탈하는 활동을 많이 함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 학문의 정체성 위기의 원인도 학자들의 학문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일탈과 그 환경을 살펴봄으로써 알아볼 수 있다.

우리 학문의 정체성 위기의 원인을 거시적 원인과 미시적 원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미시적으로 볼 때, 우리 학문의 토착성 위기 혹은 주체성 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學者들에게 있다. 즉, 학자들이 토착적 학문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학자 개개인의 생산성이 낮고(양적인 면), 더구나 창의적 연구물은 더욱 적은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이런 점에 대한 가장 가까운 원인전가는 학자 개개인이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학자 개인들이 연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다시 여러 가지 있을 것이다. 게으르거나, 너무 바빠서, 연구비가 없어서, 아예 연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학자직업에 들어와서, 연구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연구보다는 다른 활동이 더 많은 보상을 주기 때문에 등등.

그러나 학자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존재로서 그들의 學問 環境과 條件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학자들의 개체적인 문제점보다는 학문공동체의 문제점과 그를 둘러싼 환경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학자들을 둘러싼 환경도 지나친 강의부담이나 연구비 부족, 자료 부족 등의 미시적 환경도 있고, 나아가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환경도 있

다. 예를 들면 대미의존적 정치상황은 대미의존적 학문상황에 영향을 미친 것이며, 권위주의적 비밀행정 은 행정학을 행정 현실에 뿌리박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분단상황은 사회과학을 일변도로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학문은 학자들의 학문행위의 결과이고, 학자 개개인이 나타내는 학문행위상의 문제점은 학문행위의 주어진 생태적 조건 아래에서 발생된 것이라는 시각을 강조하여 논하고자 한다. 따라서 거시적으로 사회적 원인을 주로 살펴보고자 하며, 학문의 국제적 조건에 관한 논의로부터 시작하여 국내의 학문활동의 상벌체제와 경쟁체제까지의 연결고리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 3. 원인으로서는 國際的 條件 : 지식의 집중현상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학문적 상황은 하나의 세계지식체제로 형성되었으며, 지식분야의 집중과 불평등이 표면화되었다. 세계적으로 知識의 集中現象은 경제력·정치력·군사력보다 훨씬 더 집중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학문과 지식의 생산 및 보급에 있어서 세계적 불평등은 심화되어 있다. 지식의 측면에서도 세계는 중심부와 주변부로 뚜렷이 나뉘어져 있다. 世界의 知識體制는 중심체제와 주변체제로 양분되어 있다. 특히 선진국의 학문동향은 후진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학문활동의 국제적 상황에서는 한 국가의 학문활동도 그 사회의 내부상태만 분석하는 폐쇄적인 모델에 입각하여 분석할 수 없다. 한 국가 내의 학문활동도 타국가 또는 세계지식체제와의 연관하에서 분석해야 그 국가의 학문활동의 양상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다.

“지식의 평등화 없이는 세계 국가간의 평등은 없다.”라는 말을 우리는 깊이 새겨보아야 할 처지에 있다. 한국 학문의 국제경쟁력은 그 어떤 영역보다도 뒤떨어져 있다.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그래도 그 문제의 심각성이 학계, 경제계, 정치계 나아가 일반인들에게까지 기술혁신의 필요성이라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널리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그외의

인문·사회과학은 아직 그러한 인식조차 별로 없다. 한국의 외교문제를 미국의 이론에 따라 분석하고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이론에 따라 할 것인가? 대북관계는 어떠한가? 한국의 정치를 미국이론에 따라 설명하고 대책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영국의 이론에 따라 할 것인가? 한국의 사회문제, 한국의 교육문제 모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아니한가? 첨단기술은 제공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개발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문·사회과학 영역에서는 노력만 하면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지식이라고 하여 그저 받기만 해서 안 된다. 그것은 지적 노예, 지적 식민지로 가는 길이다. 지식은 인식관심이나 이해관계로부터 출발한다. 外來知識은 외래적인 인식관심이나 국제적 이해관계로부터 출발될 것이기 때문에 자국적 관점과 관심이 무시되거나 도외시되기 일쑤다.

“모든 지식은 위계질서로부터 나온다.” “모든 지식은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지식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외래지식은 비판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자국의 현상은 자국의 관점에서 진단되고 분석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요컨대 한국사회의 자생력이 높아지려면 한국 학問의 自生力이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학문의 국제적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다. 이 심각한 지적 불평등 현상을 개선하라고 선진국에 외쳐 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지역적 해결방안으로는 정치·경제·역사적 경험들이 비교적 유사한 국가들간의 학술공동체 형성을 통한 자생적 이론의 공동모색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포함된 아시아 지역 또는 극동지역에서의 이런 학술공동체는 언어장애, 정치·경제적 이질성 등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커다란 장애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가 보다 집중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곳은 물론 국내에서의 대책이다. 이를 위해서 국제적 조건과 국내 학문활동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자.

#### 4. 해외의 中心部요인과

##### 국내의 周邊部요인

국제지식체제의 兩分構造는 그 중심부로부터 주변부로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지식체제는 주변부체제이며 일제와 해방기를 거치면서 해외의존적 체제로 되어 버렸다. 일제시대에는 일본종속적 지식체제가 형성되었으며, 해방 이후에는 대미의존적 지식체제로 형성되었다. 한국의 지식체제는 중심체제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전통적 학문의 단절로 생긴 공백과 취약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 학문의 정체성 위기는 해외의 영향과 한국체제 내부 특성과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지식의 중심체제는 周邊體制에 대하여 내 가지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① 전문가에 대한 규정 및 공급기능, ② 지식(또는 이론)에 대한 정당화기능, ③ 학자의 지위분배기능, ④ 지식의 생산·분배·저장의 통제기능을 갖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유학, 자문단, 자매결연, 학술지 공급, 전문서적 공급 등 국가간의 학문적 영향장치를 통하여 한국에 전달된다.

다른 한편, 한국체제의 취약성은 傳統的 學問 활동양식(예 : 실학파나 도학파의 학문활동양식)과 내용을 단절시켰다. 한국의 현대사회과학 역사는 50년 정도밖에 안 된다. 학문의 목적과 한국현실을 연계시키는 방법논쟁 없이 외래학문 소개 위주의 학문이 전개되었다. 그러면서도 비학문적인 전통적 인간관계는 잔존하면서 우리의 학문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의미는 ① 국내이론의 결핍을 말하고, ② 외국이론과 동등한 위치에서 논의할 수 있는 우리의 논리가 없음을 말하며, ③ 인간관계 양식과 학문적 교류에 대한 규범의 부조화를 뜻한다.

결국 학문적 전통의 상실과 주변적 체제라는 두 요소의 결합은 학문적 상벌체제와 경쟁양식의 왜곡을 초래했다. 중심체제에서는 다수의 이론이 공존하면서 상호비판 및 경쟁관계에 있으나, 한국에 도입되면 경쟁관계에 있는 이론이 없기 때문에 경쟁도 비판도 없이 곧 주요이론으로 각광을 받고 그 이론가는 대가로 인정되기도

했다. 중심체제에서의 학문적 정보교환방식이 직접적·명시적인 데 비해 한국의 문화전통은 간접적·묵시적인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외래이론이 일단 한국에 도입된 다음부터 그 이론의 유통방식이 해외에서와는 달라지고 그 이론에 대한 신뢰방식도 변화됨을 의미한다. 주변부 국가에서 학문조류의 지나치게 잦은 교체도 외부의 학문조류가 도입되는 상황에 따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언뜻 보기에는 외국의 각종 학문조류가 백가쟁명하듯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어느 것도 정착되지 못하고, 어느 학자도 어느 학문조류에도 전문가가 되지 못하고 결국 모두가 피상적이며, 모두가 이 이론에서 저 이론으로 '유향하는 이론가' 신세를 면치 못하는 불행한 상황을 연출한다. 학문의 자생력이 부족하고 비판능력이 부족하다. 나아가 중심체제에서는 비교적 평등한 인간관계에서 공과 사의 구별이 뚜렷한 학문활동을 하지만, 한국체제에서는 상하서열적 인간관계와公私가 미분화된 상황에서 학문활동을 한다. 이것은 학문적 교류의 적절한 규범이 결핍되었음을 뜻한다. 또한 학자간의 상호작용방식이 학문의 본질과 부조화를 이룸을 뜻한다.

## 5. 學問的 賞罰體制

한 국가의 학문이 자생적으로 발전하려면 필요로 하는 支援體制가 다양하게 구비되어야 한다. 위에서 주로 언급한 거시적인 측면 외에도 연구비의 확보와 적절한 관리, 과중한 강의부담의 경감, 연구교수제의 채택, 안식년제의 도입, 적절한 봉급수준의 유지 등 많은 조건들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적절한 學問的 報償(또는 상벌)체제가 형성되어야 의미가 있다. 적절한 학문적 상벌체제의 확립 없이는 강의부담을 줄여도 결국은 휴식시간을 제공한 것이 될 것이며, 연구의무제는 유사논문의 편수만 늘려거나 편집기술을 향상시키기만 하는 것이 될 것이고, 연구비는 돌려가며 타먹는 것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연구자의 무능력과 나태는 연구자의 부도덕성을 부채질한다. 연구는 또 하나의 연구를 낳지만, 무연구는 표절을 낳는다. 이

러한 문제들은 결국 연구자 개인의 문제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개인의 그런 행동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조장하고 있는 풍토와 제도의 문제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학문적 경쟁과 상벌체제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며, 모든 학문발전의 정책은 이 문제와 결부시켜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의 학문적 상벌체제가 왜곡된 모습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지만, 몇 가지 예만 들어보자, 學者社會化 과정에서 살펴보면, 『교수신문』의 최근호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박사논문심사가 하나의 통과리례와 같은 경우가 허다하다면 그런 심사위원과 그 박사는 분명 학문적 상벌체제의 정도를 걷고 있는 것이 못 된다. 요즘은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외국박사의 능력에 대한 지나친 신뢰와 지위부여 역시 학문적 상벌규범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학자적으로 入職過程에서 모교출신 선호(동종번식), 교수사회의 족벌성과 가족성, 각종 인맥과 권력을 통한 압력, 심지어는 뇌물을 통한 입직까지 있는 상황은 학문적 경쟁규범을 근본적으로 깨뜨리고 있는 것이다. 입직 후의 과정에서는 학문적 연구를 통한 보상보다는 매스컴에 신경쓴다든지 정치성을 띤 사교에 신경쓰는 경우가 없지 않다. 학자들까지 세속적 인기관리에 더 몰두하게 하는 상벌체제의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돌려가며 나눠먹기식의 연구비 분배나, 연구비 받은 것을 무슨 혜택을 받은 것으로 계산하는 대학행정은 사실상 연구 안 하기의 관행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 연구비, 특히 고액의 연구비는 로비를 잘하는 분이 많이 탄다고 하며, 또 그런 경우 '연구비 쥐기' 까지도 있다니 이런 상황에서 좋은 연구가 나오겠으며 또한 국고낭비는 얼마인가?

교수면 그의 연구업적과 관계없이 직급과 호봉에 따라 동일한 대우와 동일한 봉급을 주는 것도 평등주의적 정책일지는 모르나, 무사안일과 무연구를 부채질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학문사회에서의 연공서열제와 사실상의 증신공용제는 학문을 정체시키고 있다. 40~50대에 학문적 조르현상을 나타내게 하는 원인의 하나이다.

## 6. 學問的 競爭體制

학문의 세계는 비판과 논쟁이라는 이름의 ‘싸움’을 통하여 발전한다. 우리나라는 역사상 李退溪와 奇高峯 사이의 理氣 이원론과 일원론에 대한 빛나는 논쟁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비논쟁적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거시적으로 볼 때, 단일민족이 단일문화를 이루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가 허용되지도 발달되지도 않았다. 다양한 이익집단이 발달되지도 않았으며, 그런 이해관계에 따른 또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당화 논리가 발달하지도 않았다. 또한 시면계급 형성과정에 사회과학적 논쟁도 전개되지 않았다(‘80년대의 제3세대가 제기한 논쟁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과학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거대한 정부나 권위주의적 상층부의 주장이 그대로 통용되었던 권위주의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하층부 사람들은 논쟁을 제기하여 실익을 얻은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하다. 문화의 단일성, 이익집단의 미발달,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체제 등의 거시적 요인들이 객관적 또는 다른 관점에 입각한 분석에 기초한 반대 견해의 표방이나 비판과 논쟁이 취약한 토양을 형성해 왔다. 이런 점에서 사회의 민주화 정도가 학문적 경쟁을 조장하고 따라서 학문발달을 자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한국의 정치학의 발달수준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런 점이 정치학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학문영역에 해당되는 요인이다. 왜냐하면 학문적 경쟁은 학자간의 경쟁 이상으로 정치권력과의 경쟁, 권력가진 관료와의 경쟁, 사회의 각종 집단과의 경쟁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개방적 태도의 정도가 학문에 영향을 미친다. 정보와 자료의 축적과 개방이 미비한 상태에서 학문이 발전하기도 토착화되기도 어렵다. 정부, 회사, 은행, 군대 등의 각종 資料가 開放되어야 한국의 인문·사회과학이 발달할 수 있다. 연구를 반정부 또는 친정부로 보는 시각 자체가 학문의 자율성을 해치고, 연구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만든다. 사회의 성장과 비판의 성

장과 학문의 성장은 상호 비례적 관계에 있다. 지성인의 비판적 역할을 늘 강조해 온 지성사는 비판하는 지식인이 없는 사회는 혁신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려움 없는 사회에서 두려움 없는 논쟁이 일어날 수 있고, 백가쟁명의 학문이 꽃필 수 있다. 한 국가의 학문수준은 그 국가의 집단적 문제해결능력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국학계의 비판은 우선 적다는 데 문제가 있다. 소수 있는 비판도 개괄적이거나 간접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비판이 있더라도 반응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論爭에 참여하는 자발성의 정도에 따라 ‘자발적 논쟁’과 ‘비자발적 논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후자는 주로 학회나 출판사 등의 기획에 따른 토론이나 논쟁을 말하며, 한국의 논쟁은 대부분 이런 비자발적 논쟁에 속한다. 논쟁의 지속성으로 볼 때 대체로 일회성 논쟁이 대부분이다. 또한 논쟁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 유형에 따라 ‘교류형 논쟁’과 ‘단절형 논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대체로 단절형 논쟁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학문적 비판이 인신공격으로 오해받기도 한다는 점이다.

비판의 결핍현상은 한국사회의 서열주의, 선배나 은사 우선주의와 같은 사회관계 및 그러한 사회관계 속에서 유형화된 간접적·묵시적 의사소통유형과도 관련되어 있다. 서구식 이론은 도입되었지만, 서구식 논쟁과 비판양식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들을 권위적·무비판적으로 도입하고 적용하고 가르쳐 왔다.

한국학계의 無批判 現象 역시 위에서 살펴본 국내체제의 취약성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체제의 영향에 따른 주변성과도 관련되어 있다. 도입된 외래이론들은 잘 체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은 이론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의 학자들은 비판의식을 갖기 이전에 먼저 그러한 이론에 유혹되어 있다. 또한 외래이론은 한국의 경험과 밀접한 관련을 맺지 못한 것이거나 한국의 경험과 무관한 것들이다. 이와 같은 외래지식의 한국의 경험과의 관련성 결핍은 외래이론을 비판적으로 도입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고, 동시에 비

관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더욱이 외래이론은 교묘할 정도로 체계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비판하기 더욱 어렵다.

논쟁없는 학문은 스코어 없는 경기, 구경거리 없는 경기와 같다. 학문사회에 신바람이 일어나려던 경기에서 타이스코어, 역전, 재역전 같은 흥과 관심을 불러일으킬 學問的 論爭이 일어나야 한다. 기성학자의 참여가 부족하긴 했지만, '80년대 중반과 후반의 한국사회구성체 논쟁은 한 가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 7. 건전한 顧客과 牽制勢力

나아가 학문사회에 대한 정당한 견제와 비판 세력이 없음을 지적하고 싶다. 학문의 고객이 비판과 견제세력으로 등장되어야 한다. 연구이나 프로스포츠가 관객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듯이, 학문도 고객이 있어야 발전한다. 학문활동의 고객은 일반고객, 조직고객(정부, 기업체 등), 그리고 전문가고객(동료학자들), 학생고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문활동에 이들 고객들은 대단히 중요하며, 각각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다르다. 따라서 각 고객들은 학문적 경쟁의 상벌체계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먼저 모든 유형의 고객의 海外指向性은 학문토착화의 저해요인임이 지적되어야 한다. 일반고객은 대중강연, 신문·잡지 등의 大衆性을 띤 지면에서의 투고 활동을 조장한다. 대중적으로 유명한 학자가 훌륭한 학자로 인정되고 보상받는 사회라면 많은 학자들이 이 방면의 활동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조직고객은 정부나 기업체 또는 각종 직업세계에서 그 방면의 전공자와 지식을 활용하는 경우이다. 특히 조직고객의 해외지향성이 높은 점은 더 중요한 문제이다. 학자, 공무원, 군인, 회사원 모두가 해외로 연수 떠나는 나라가 한국의에 얼마나 있는지 안타까울 지경이다. 組織顧客은 일반대중과는 달리 조직에서 돈과 선택권을 갖고 있으며, 나아가 연구의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고객은 정보를 갖고 있다. 고객이 정보를 주지 않으면 생산자는 적절한 생산을 할 수 없다. 즉, 현실적

합성이 높은 지식을 생산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좋은 조직고객은 학문발전의 훌륭한 반려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정부와 산하기관에서 보내는 해외연수를 대폭 국내연수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일반고객과 조직고객이 건전하면, 학자들이 세속적 인기관리와 해외의 존적 학문에 몰두하는 숫자가 대폭 줄어들 것이다.

專門家 顧客은 동료학자들로서 상호정보의 교류와 비판을 통하여 누적적 학문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집단적 노력을 할 수 있다. 만약 전문가 고객은 존재하지만 고객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동료의 논문을 심각히 검토하고, 업적은 인정해 주며, 새로운 시각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은 비판하는 역할) 학문발전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동료가 읽고 비판해 주지 않는 상황은 전문가 관중이 없는 경기와 마찬가지로 발전의 한계가 명백하다. 총론학자나 일반이론가는 많지만, 각론의 전문가는 별로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전문가 고객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 전문가 고객은 무엇하고 있는가? 그들은 대부분 외래이론의 고객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문 중에는 그 학문이 봉사하고 있는 영역의 실제와 기능과 현실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분석과 그 대책을 구체화하는 학자는 별로 없다. 학계의 이런 점이 조직고객으로 하여금 해외유학을 선호하게 하는 점도 있다. 또한 조직고객의 해외유학 선호는 학계가 현실과의 거리를 좁히는 데 공헌하지 못하는 악순환 관계에 있다.

학생고객은 말할 것도 없이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말하며, 이들 역시 주체적 역량에 따라 학문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종래처럼 學生顧客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교수가 주는 지식을 받아 먹기만 한다면 학문발전에 거의 공헌을 못하며, 오히려 교수에게 자극을 주지 못하고 나태하게 할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는 학문발전을 저해시키는 것이다. 학생들도 비록 배우는 위치에 있더라도 주체적 고객이 되어야 한다. '80년대 후반에 있었던 몇몇 대학에서의 교육과정 백서의 발표라든지, 교수와 강의 내용에 대한 비판적 주장은 그 타당성이 있는 한 주체

적인 고객활동이라 볼 수 있으며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침체된 한국의 학계에 학생고객이 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 8. 主體的 學者들

피터 버거는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포로, 꼭두각시, 주체적 인간의 3단계로 풀이하고 있다. 이 풀이는 한국의 학자 개개인들과 한국의 학계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적 환경과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우리는 중심부 지식체제의 포로나 꼭두각시로 남아 있을 수도 없고, 남아 있어서도 안 된다. 우리가 하고 있는 學問活動의 環境에 도전해야 한다. 위에서 지적한 것들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 것들인가를 분석해 본 것이다. 이런 분석들은 우리의 위치를 확인

해 주고, 우리를 학문적으로 의식화시켜 주며, 우리를 우리로서 인식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도 우리의 학문에도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도전해야 할 것이다. 도전과 개혁은 아픔을 전제로 한다. 정체성 위기의 원인을 제거하려는 개혁의 아픔은 기성학자들이 먼저 질 수밖에 없다. 이런 아픔이 두려워 그냥 두면 후세와 역사에 커다란 짐을 키워서 맡기는 것이 된다. 한국 학문의 正體性 위기는 우리로부터 克服되기 시작해야 한다. 우리와 함께 각 분야에서는 이 위기극복을 위해 공동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학문의 정체성 혼란의 결과는 모두가 그 심각한 해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

### 〈參考文獻〉

이증각, 『한국교육학의 논리와 운동』, 문음사, 1989.